


2020. 11. 2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 처) 서울경제	
기사링크	
(요 약) 삼성중공업, 3조 '잭팟' 터졌다...창사 이래 최대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중공업 총 25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선박 블록(선체 일부) 및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 - 올해 수주목표 달성을 15%에 머무르다 이번 수주로 목표 45% 일거에 달성 	
 <p>삼성중공업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선박 수주 계약에 성공했다. 이는 중형 자동차 10만대에 해당되는 규모다.</p> <p>삼성중공업은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선박 블록(선체 일부) 및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p> <p>이에따라 삼성중공업의 수주잔고는 지난 6월말 기준 199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5개월만에 다시 200억달러 이상(211억달러)으로 늘어났다.</p> <p>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수주목표의 절반(45%)을 일거에 달성했다. 현재까지 누계 수주실적은 총 38억달러를 기록 중이다.</p> <p>이번 수주 직전까지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목표 달성은 15%에 머무르고 있었다.</p> <p>삼성중공업은 모잠비크, 카타르 등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서 LNG 운반선 발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체결된 선박 건조의향서(LOI)와 추가 옵션 안건들을 올해 내에 최대한 실제 계약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p> <p>환경부는 모든 안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 감축을 위해 검토하는 내용이며 향후 정책 성과와 기술 발전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정교화 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기술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DAC나 CCUS 등과 같은 탄소 포집 기술은 현실가능성이 낮은 기술이다.</p>	

2020. 11.2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 처) 이투뉴스	
기사링크	
(요 약) 입지규제로 설자리 없는 태양광...산지 빼면 1%도 안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한 면적 급감... 산지태양광 제외하면 1% 미만 - 지자체의 태양광 입지규제는 3년전과 비교하면 48% 증가...입지규제 폐지의 목소리 ↑ 	
<p>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3분의 2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산지태양광을 제외하면 1%도 되지 않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p> <p>기후솔루션이 17일 발표한 '태양광발전사업 입지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함평군, 경남 함양군, 경북 구미시의 현행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 결과 함평군은 46% 함양군은 47% 구미시는 67%에 이르는 면적이 설치가능 부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솔루션이 태양광발전 대상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3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분석해 나온 결과다.</p> <p>일반적으로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해 이격거리 규제지역을 모두 고려할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전남 함평군은 전체 면적의 11% 경남 함양군은 26% 경북 구미시는 7%에 그쳤다.</p> <p>산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는 더 줄어든다. 보고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하면 설비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전남 함평군이 0.78% 경남 함양군이 0.64% 경북 구미시는 0.09%에 불과하다.</p> <p>산지태양광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농촌지역조차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p> <p>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기초지자체가 도입해 운영 중인 이격거리 규제 영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입지규제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사업추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격거리 규제를 피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실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p> <p>보고서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조례 형태로 도입한 기초지자체는 123곳으로 나타났다. 3년전과 비교하면 규제는 48% 증가했다.</p> <p>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예외적"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방향에 맞춰 지금이라도 입지규제를 폐지해야하며,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p>	

2020. 11. 24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2322571	
(요약) 불어난 '빚투' 막차 탄 '영끌'...韓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 -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웃돌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고 증가속도도 상위 - 코로나로 인한 개인의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 자영업자의 생계자금 마련 대출 수요 등이 크게 늘어 급증	
<p>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 1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p> <p>23일 글로벌 금융회사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F)가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부채: 부채 쓰나미의 공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0.6%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8년 말 97.9%에서 작년 말 95.3%로 2.6%포인트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100%를 넘어섰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국내외 관련 통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p> <p>코로나 19 사태로 올해 GDP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개인의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 자영업자의 생계자금 마련 대출 수요 등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p> <p>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 1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p> <p>23일 글로벌 금융회사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F)가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부채: 부채 쓰나미의 공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0.6%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8년 말 97.9%에서 작년 말 95.3%로 2.6%포인트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100%를 넘어섰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국내외 관련 통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p> <p>코로나 19 사태로 올해 GDP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개인의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 자영업자의 생계자금 마련 대출 수요 등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p> <p>한국의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올 3분기 기준 110.2%로 34개국 중 8위였다. 정부 부채 비율은 45.9%로 22위였다.</p>	

2020. 11. 24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J5804QN	
(요약) 태양광, 풍력 외치는 바이든...한화, LS등 신재생업계 들쭉 - 청정에너지 인프라 2조달러(2000조원) 이상을 쏟아 붓겠다 공언해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 -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 자원이 신재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 산업이 들쭉.	
<p>바이든 당선인 친환경 주요 공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5년 전력부문 탄소배출 제로화 2050년 100% 청정에너지 전환 미 전역 태양광 패널 5억개, 풍력발전용 터빈 6만개 설치 <p>美 태양광 시장 전망 (단위:MW) 13,272 (2019) → 19,565 (2020) → 20,408 (2021) → 18,288 (2022) → 19,115 (2023) → 19,310 (2024) → 19,987 (2025) 자료:우드맥킨지</p> <p>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공약했다. 오는 2050년까지 미국 내 청정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달러, 한국 돈으로 2,000조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산업은 기존 화석연료를 두둔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비해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호재를 맞은 셈이다.</p> <p>미국의 대규모 발전설비는 약 1,100기가와트(GW)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천연가스와 석탄발전 설비가 절반을 훌쩍 넘는 700GW 수준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대로 단순 계산을 하면 700GW 규모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 자원이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 산업이 들쭉이고 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전역에 태양광 패널을 5억개 설치하고 풍력발전용 터빈을 6만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p> <p>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는 한화솔루션(큐셀 부문)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기관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내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올 상반기 22%의 점유율을 기록해 8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21.5%의 점유율로 1위에 올라 있다. 현지 2위(주거용) 업체인 LG전자에도 바이든 당선은 커다란 사업 기회를 안겨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태양광=소비재'라는 인식을 가진 덕에 현지 가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LG전자는 그간 쌓은 브랜드파워를 태양광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현지 태양광 시장에서 선도 업체들로 자리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중국 제품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 미국 내 중국산 공급과잉 이슈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판매 단가가 내려가 LG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p>	

S그룹도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투자 확대'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LS의 주력 계열사들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전기차 부품, 태양광과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이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자열 LS그룹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태양광 및 ESS 등 주력사업 분야에서 잇달아 수주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디지털 운영체계 확보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S전선은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중 해상풍력발전단지 확대,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함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및 글로벌 케이블 솔루션 리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LS일렉트릭은 2018년 북미 ESS 최대 기업인 파커하니핀으로부터 에너지그리드사업부를 인수해 북미 현지법인의 자회사 LS에너지솔루션스를 출범시키며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 11. 25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매일경제

[기사링크](#)

(요약) -80°C 냉동고에 드라이아이스...미 전역 백신 수송작전 준비

-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이 -70°C 이하의 초저온 '콜드 체인'을 필요로 하여 화물회사들 백신 저온 운반 준비 중
- 냉동창고 및 드라이아이스 품질사태 등 콜드 체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자금 투입 중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승인과 접점을 앞두고 이를 미국 전역으로 옮기는 '수송 작전'이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화물회사 UPS는 화이자의 백신을 저온에서 운반하기 위해 자체로 드라이아이스 생산을 시작했고 영하(-) 80°C까지 백신을 냉각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를 주문

했다. 화이자의 백신은 -70°C 이하의 초저온 '콜드 체인'을 통해 유통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UPS는 "한 시간에 드라이아이스를 540kg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며 "화물 중심 공항이 있는 캔터키주 루이빌에서 생산된 이 드라이아이스는 24시간 안에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 시설에 배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협력사인 스틸링 울트라콜드에서 제작한 백신 저장용 소형 초저온 냉동고도 백신을 접종하게 될 의료시설에 배송할 예정이다. 다른 화물업체 페덱스와 DHL도 드라이아이스와 초저온 냉동고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곧 초저온 보관이 필요없는 백신이 나오는 만큼 초저온 냉동고를 사지 말라고 일선 의료시설에 권고했지만 일부 병원들은 이미 냉동고를 찾아 나섰다"라며 "초저온 냉동고의 가격은 1만~1만5천 달러(약 1천110만~1천670만원)"라고 전했다.

미 보건당국은 오는 12월 10일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하면 첫 접종분으로 640만회분을 전국 의료시설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24일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진행되면 우리는 (FDA 승인 일인) 12월 10일 이후 곧장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유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12월 말까지 미국에서 4천만회분이 접종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020. 11.25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매일경제

[기사링크](#)

(요약) 하락장 7000억 베팅한 개미...역대급 상승장에 '안절부절'

-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개미투자자들 지수 하락에 투자 중...전문가들 투자자 손실 우려
- 하지만 개인의 인버스 매수가 지수 하락에 대한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11월 코스피 개인 매수 상위 톱 10
(단위=억원)

순위	종목	개인
1	KODEX200 선물인버스 2X	6,495
2	네이버	5,659
3	삼성전자	2,709
4	KODEX 인버스	1,314
5	LG전자	1,163
6	대한항공	1,127
7	금호석유	1,026
8	SK텔레콤	969
9	CJ제일제당	870
10	기아차	809

*24일 누적매수액 기준, 자료=한국거래소

코스피가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달 들어 지수 하락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개미들이 개별 종목의 지수가 상승하자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지면서 지수 하방에 베팅을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대거 사들이는 모습이다.

주요 증권사 전망대로 연말부터 내년에 코스피 3000 시대를 여는 등 계속 상승할 경우 특히 인버스 레버리지(일명 곱버스) ETF에 투자하는 개미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전문가들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은 'KODEX 200 선물인버스 2X'라는 곱버스 ETF 상품을 6495억원어치 집중 매수했다. 4위는 레버리지 가 없는 인버스 ETF인 'KODEX 인버스'로 1314억원을 개인이 매수했다.

다. KODEX 200 선물인버스 2X는 F-KOSPI 200 일별수익률 -2배를 추적하는 ETF 상품이다. 지수가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는 장에서는 손실이 크게 불어날 수 있어 위험한 상품으로 꼽힌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이 그간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과 함께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개인의 인버스 매수가 지수 하락에 대한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연초 이후 곱버스 ETF 시장에 개인 투자자금이 3조3000억원 유입됐다"며 "곱버스 ETF 투자 손실이 막대해 회복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매일 코스피가 2%씩 두 달간 빠져야 이론적으로 전고점에 도달한다"며 "단기투자에 적합한 곱버스 시장에서 물타기를 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투자자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인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한 매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개인들은 초단기 레버리지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1억원을 KODEX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면 수수료를 뺀 수익금이 3600만원에 이른다.

2020. 11. 26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스포츠동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382&aid=0000873854>

(요약) "강남보다 용산"...부동산 투자자는 왜 용산을 주목할까?

- 정부 주도의 국가공원 형태로 조성될 총 면적 303만㎡의 용산공원 개발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 용산공원 동편은 이미 1조원이 넘는 초고가에 매각돼 상업시설 조성이 추진, 서편은 복합공간으로 재구성예정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정부 주도의 국가공원 형태로 조성될 총 면적 303만㎡의 용산공원 및 공원 일대 개발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남다른 투자가치를 눈치챈 투자자들의 발길이 용산으로 몰려들고 있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와 고급 빌라들이 즐비한 전통 부촌의 프리미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창조형' 개발 모델이라는 차별성과 불확실한 개발 호재를 넘어 법령에 근거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확고한 안전성이 인기의 비결로 지목된다.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마주한 용산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던 미군기지가 거대한 도심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정부는 2004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체결을 기점으로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종합기본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어 미군부대의 팽택 이전이 마무리된 2018년부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여의도 전체 면적을 초과하는 303만㎡ 규모의 용산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용산공원의 청사진은 '미래세대의 행복과 희망이 숨쉬는 생태 공간, '시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 공간, '남산, 한강과 연결되는 서울의 대표적 자연동력, 그리고 자유와 평화, 번영, 희망을 상징하는 국가공원이다. 용산기지를 서울의 녹색 심장이자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취지다.

미국 센트럴파크에 육박하는 거대 규모의 용산공원을 위시한 용산 일대 개발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젯거리다. 한 전문가는 "보통의 도심 공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을 맡지만 용산공원은 공원의 조성, 관리 외에 주변 개발 및 재정비, 재개발 등 관련 사업 상당수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더욱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가 실현되기까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간단치 않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용산기지 반환까지는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고 말한다. 당초 정부는 2019년부터 용산기지 일대 토양 정화 작업을 시작해 2022년 즈음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착수,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세웠지만 한미연합사 이전 문제와 최대 1조 원으로 추산되는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에서 한미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 역시 용산기지의 역사와 규모가 남다른 만큼 오염도나 정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이 여타 반환 부지들의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부지 전체가 용산공원으로 녹지화되고, 공원의 조성 관리, 운영, 개발 등을 정부가 도맡는 데에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미 간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 용산기지에 남아 있는 한미연합사 본부 이전 건에 대해서도 “연합사가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관련 부지들의 행정적, 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평택기지 이전을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용산공원 동편 UN 군사령부(유엔사) 부지는 이미 1조 원이 넘는 초고가에 매각돼 주상복합단지와 호텔 등 상업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그 아래 수송부 부지와 서편 캠프킴 부지는 주거, 상업, 문화 등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캠프킴 부지의 경우 용적을 완화로 최고 50층 높이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돋보이는 한국의 롯데기힐스로 거듭날 전망이다. 공원 서남쪽, 옛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8000가구 규모의 주택과 호텔, 쇼핑몰 등 상업시설, 국제전시시설 등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와 미니신도시로 변신을 꾀한다. 또 캠프킴 부지와 용산공원에 인접한 남영역, 삼각지역, 용산역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되는 이촌역 역세권, 용산역~남영역~서울역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라인, 원효로 라인의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투자자들은 특히 **KTX와 GTX-B 노선, 서울지하철 4호선, 신분당선(예정) 통합역사 지하화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용산역과 그에 따른 직간접 수혜가 기대되는 삼각지역 일대를 눈여겨보는 추세**다.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자 용산공원과 한강을 지척으로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입지의 가치가 본격화되면서, 위치는 물론 시세 면에서도 용산의 ‘최종삼’으로 우뚝 서리라는 예측이다.

지역 공인중개사 A씨는 삼각지역세권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코레일의 관리 소홀로 철길 주변 기반 시설들이 낙후되며 슬럼화 문제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용산의 핵심 개발호재들을 동서남북 전 방위로 누릴 수 있는 알짜 중의 알짜 입지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수년 내에 용산공원이 단계별 완공 및 개방을 진행하면 국가대표급 규모와 구성에 걸맞은 프리미엄 공세권과 정부의 주변 개발 제한 정책에 따른 공원 및 한강 영구 조망권을 고루 갖춘 삼각지역 일대 주거상품들의 시세는 그야말로 한정 없이 치솟을 것”이라며 요즈음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강남보다 용산”이라는 말의 의미도 짙어졌다. “가성비나 가심비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안정성이나 실질적인 상승 여력 면에서도 이제는 용산이 강남에 뒤처질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2020. 11. 26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 처)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03201?sid=101

(요 약) 사모펀드 설정액 9조서 5조로...전문 운용사들 줄폐업 위기

- 최근 운용사의 수탁계약 체결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 모든 부분에서 사모펀드 수탁환경이 악화
- 교호율의 수탁보수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어려운 가운데, 문제는 금융당국이 수탁은행 책임을 계속 강화 계획

중소형 자산운용사 A사는 해외 선진국의 기술주 중심 상장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공을 들인 끝에 상품 개발을 마쳤다. 하지만 수탁업무를 맡아줘야 할 은행들이 운용사의 몸집이 작다는 이유로 계약을 꺼리며 발만 구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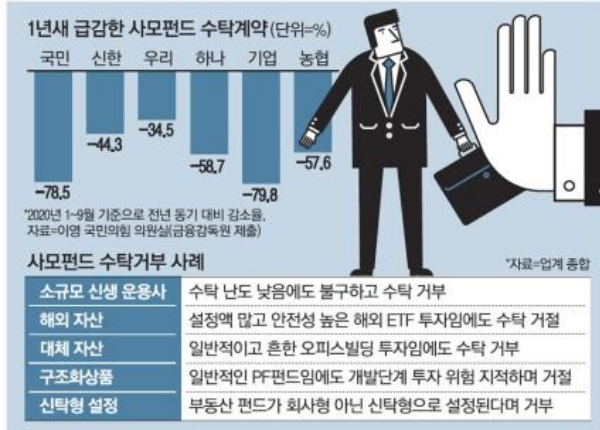
신생 자산운용사 B사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통상적인 국내 투자로 수탁 난도가 가장 낮은 편이지만 수탁은행에서는 펀드 자산인 부동산에 임차인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수탁을 거부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후폭풍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권의 수탁 거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모전문 자산운용사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아우성이다. 반면 은행들은 수수료는 적는데 책임과 리스크만 커서 쉽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당국도 수탁은행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분위기라 당분간 사모펀드 수탁계약 거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운용사의 수탁계약 체결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지역이나 모집규모, 투자대상, 투자자 등을 가리지 않고 사모펀드 수탁 환경이 악화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자산운용사 사모펀드는 전형적인 오피스빌딩에 투자하고자 했으나 최근 수탁계약을 거절당했다. 대체자산인 부동산 펀드가 신탁형으로 설정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해당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내 선호투자방식이던 부동산 투자조차 최근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모펀드 설정액 역시 올해 대폭 줄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9조2000억원에 달했던 사모펀드 설정액은 올해 들어 5조1000억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전년 대비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



펀드 내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탁은행들이 위험 부담을 이유로 과도한 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장애물도 등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자 관계자는 "고율의 수탁보수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탁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수탁을 거절하거나 체결하더라도 외부에 공표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사모펀드 수탁을 거부하는 이유는 버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책임은 크기 때문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기존에 느꼈던 사모펀드 관련 수탁은행의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실제로 사모펀드 수탁보수는 평균적으로 0.02~0.03%로 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수탁을 맡게 되면 은행 수익은 많아 봐야 1500만원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사 책임을 강화하고 나서자 은행들이 수탁보수를 0.1%까지 10배 가까이 올리는 케이스도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탁은행 책임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지시 등에 대해서 수탁사의 감시 의무를 새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탁은행은 사모펀드 운용지시가 법령, 투자설명서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이 있으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운용사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수탁사에 부과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사모펀드 수탁계약 기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건강한 금융 시장을 만드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 1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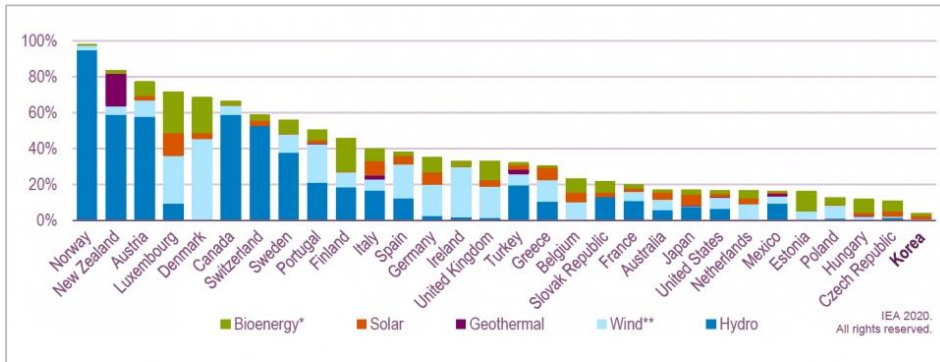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이투뉴스

[기사링크](#)

(요약) "韓 폐쇄적 전력시장 에너지전환 걸림돌"

- 국제에너지기구(IEA) 한국의 폐쇄적 전력시장 구조와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해 일침...에너지전환의 걸림돌
- 높은 비중의 가변성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의 폐쇄적 전력시장 구조와 과도한 정부 개입이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2012년에 이어 8년만에 발간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다. IEA는 회원국에 대한 정책조언을 위해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에너지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기구의 심층보고서란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IEA는 26일 공개한 한국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력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로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하고 전기위원회 역할은 자문 제공에 그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정부가 한다"며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발전과 소매부문을 과점 또는 독점하는 시장체제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쥐락펴락하는 행태로는 정부가 원하는 에너지전환도 요원하다는 쓴소리를 건넨 셈이다. 이에 대해 IEA는 "전기위원회 지위를 전력산업 규제 기관으로 상호 조정하고 요금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기위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는 산학 전문가들이 줄곧 지적해 온 과제다.

한국의 에너지믹스 현황에 대해서도 IEA는 적나라한 표현으로 일침을 가했다. IEA는 보고서에서 "2018년 1차 에너지 공급량의 85%를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84%에 달하는 에너지수입 의존도와 IEA국가 중 가장 높은 산업용 에너지비중으로 (한국을)특정할 수 있다"며 **"한국은 에너지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중에 있어 IEA 국가 중 최하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2020 재생에너지 확대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인 30~35% 확대계획을 거론

하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분야에 걸쳐 탈탄소화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 및 제도적 장벽을 해결하며 유연한 시장구조를 도입하고 첨단기술과 혁신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전환정책과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선 고무적인 평가를 내놨다. IEA는 "한국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번 세기 마지막 분기 중 탈원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비중의 가변성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IEA는 청정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력 및 가스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에너지과세 및 외부비용 반영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출 처) 아시아경제

기사링크

(요 약)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 ... 탄소배출 '0' 시대로

- 제로에너지건물의 전세계적인 확대...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 수단
- 한국도 신축 건물 뿐 아니라 리모델링에도 제로에너지 모델 적용 의무...앞으로 도시 단위의 제로 에너지 실현 가능

제로에너지건물 개념도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 유입 본사가 사용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디엣지(The Edge)'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 건물로 꼽힌다. 곳곳에 설치된 3만개에 가까운 센서가 직원들의 움직임이나 실내온도, 냉·난방 여부, 조명 밝기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에너지 사용을 통제한다. 사람이 없는 사무실은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난방과 조명은 적정 수준으로 조절돼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 건물 지붕과 외벽, 인근에 위치한 암스테르담대학 지붕에 깔린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해 자체 조달하고, 빗물을 모아 화장실 변기와 정원에 사용한다. 15층 전체 외벽이 유리로 설계된 이 건물의 전기 사용량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빌딩과 비교할 때 30%에 불과하며, 태양광과 지열 발전을 통해서 평소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이상(102%)을 생산하고 있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교육구(Garden Grove School District)는 50~60년대에 지어진 학교 건물에 제로 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해 개보수했다. 건물 창은 단열효과가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광조절장치를 적용했으며 주차장엔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다. 또 자연환기를 이용하는 데 최적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창문이 열려 있는 동안엔 냉난방환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도록 해 에너지 낭비를 막았다. 이 곳 학교 중 하나인 산티아고 고등학교에선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는 전광판이 설치되자 학생과 교사·직원들이 앞다퉀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벌였다. 하루 5500인분의 급식을 만드는 랄스톤 중학교 조리실은 형광등을 LED로 교체해 전기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환기 팬과 배기후드 등을 개선해 주방 내부 온도를 낮췄다.

이에 각국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올해 신축 주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공공건물과 기존 건물의 50%를 제로에너지건물로 대체할 계획이다. 영국은 2016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도록 권고했고, 독일은 제로에너지건물의 경우 일반 건물보다 85~90%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 신축 주택의 평균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건물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7년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올해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물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은 2023년부터, 1000㎡ 이상 민간건축물은 2025년 이후부터, 2030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을 제로에너지로 설계해야 한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건물 신축 뿐 아니라 리모델링에도 이 같은 제로에너지 모델을 적용하게 된다. 개별 건물들의 에너지제로화는 다른 건물들과의 연계 또는 지역·지구 단위, 나아가 도시 단위의 제로 에너지 실현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유기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장은 "제로에너지는 기술의 문제보다는 정책적 면이 강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정책에 시동을 걸면 관련 산업들도 이에 맞춰 속도를 내게 된다"며 "앞으로는 건물이나 공동주택을 넘어 한 도시 안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나 발전소 등의 다양한 에너지를 묶어 자립화를 이루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도 모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